광주시, 민간공원 의혹 기소 공무원 재판 촉각

11일 열려…예측 범위 넘어선 진술·증거 제시될까 예의 주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의혹 관련 첫 재판이 오는 11일로 예정되면서 광주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과 함께 검찰에 의해 '공범'으로 지목된 이정삼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파장이 확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특례사업을 둘러싼 핵심 공무원 3명 이상이 입건 또는 재판에 넘겨지고, 시청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도 잇따라 진행되면서 광주시를 보는 안팎의 시선은 따갑기만 한 상황이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남준)은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 이 전 국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 전 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제안서 평가결과표(점수표)를 광주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제안심사 평가 요소 가운데 하나인 유사사업 실적 등을 제안심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상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이 전 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지난달 1일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한 바 있다. 지난 4월 광주경실련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이었다.

검찰은 '행정부시장, 감사위원장, 담당국장' 3명의 고위공무원이 공모, 직원을 남용해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협상자를 바꿨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결과표(공문서) 유출→업체 이의제기→특정감사→평가오류 발견 및 정정 방침→제안심사위 감사결과 수용 거부 및 파행→정종제 행정부시장 참석, 제안심사위 회의서 관철→우선협상자 변경(최종발표)'까지의 일련의 행정행위가 '짜인 각본' 아래 진행된 것이라는 의심이다.

그러나 정 부시장, 윤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 동력이 한 풀 꺾이는 모습이었다. 이 와중에 공범으로 지목된 이 전 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예측 범위를 넘어선 진술 또는 증거가 제시될까 광주시가 예의주시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다른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유죄 확정 전 또는 건설사 귀책 사유로 볼만한 비리 협의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리 의혹만으로 우선협상자 자격 또한 박탈 시킬 수는 없다"며 "판결 확정 전까지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칙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시, 행정·경제 등 혁신 성과 두각

각종 공모·경진대회 잇단 수상

광주시가 행정, 경제, 교통 등 각 분야 공모, 경진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면서 혁신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 디자인단 경진대회에서 '영구 임대주택 공동체 복원 프로젝트'로 장관상을 받았다. 이 사업은 낙후되고 공실이 늘어나는 영구 임대주택과 청년주거 문제를 복합적으로 풀어내려고 추진했다.

지난달 26일에는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인사 혁신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희망 인사시스템 구축, 핵심 현안 담당관제 신설, 공공기관 통합채용 등의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최 협업 경진대회에서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교통사고 줄이기'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에서는 구직, 채용, 근속 등 단계별 청년 취업 지원사업인 '광주 청년 일 경험 드림' 과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달 22~24일 서울에서 열린 정부 혁신박람회에서 '광주시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와 인공지능'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광주형 일자리와 인공지능 육성으로 산업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공모

전남도, 내년 1월29일까지

전남도는 축산 악취·질병 문제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2020년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2020년 1월 29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대상 축종은 한우, 돼지, 젖소, 닭, 오리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환경, 질병, 무허가축사 등 축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사와 가축 분뇨 처리 및 방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환경오염과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미래 지향적 최첨단 축산단지다.

첨단축산시설 및 최적의 데이터 기반 생산시스템 구축, 냄새 없는 축산환경 조성, 질병 사전 차단을 위한 체계적 방역시설, ICT 장비 사용 및 데이터 분석 등 현장 실습형 교육장 등이 설치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전국 5개소를 선정한다. 개소당 15ha규모로 4년간 695억~795억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축종별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시·군에서 참여 농가를 확보해 조직화(법인 또는 조합)하고, 서류심사용 사업계획서 및 대면 보고용 발표자료를 작성해 시·도를 경유해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농식품부에서 방역·분뇨·ICT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평가, 구두(PPT) 발표 등을 종합 평가 후 최종 선정한다.

주요 평가 내용은 부지확보 및 참여농가 확보,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이다. 참여 농가는 입지제한지역 내 무허가 축사 보유자,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 가축 사육이 불가능한 농가, 마을 주변 축산농가, 청년 창업농가 등이다. 세부 기준은 시군 및 농가 공동협력단에서 정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 민속 연날리기 대회

전남농업박물관 7일 영산호

'전국 민속 연날리기 대회'가 오는 7일 영산호관광지 농업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5회째인 '전국 민속 연날리기 대회'는 일반인과 초등학생 참가자들 대상으로 남도 전통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열린다. 액막이 연날리기와 일반부, 학생부 경합 등으로 나뉘는데 액막이 연날리기의 경우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나 '송액영복(送厄迎福)' 등 문구가 새겨진 액막이연을 날리며 올해의 나쁜 액을 보내고 새해 복을 기원한다.

일반부는 연줄 끊기, 학생부는 멀리·높이 날리기로 순위를 결정한다.

부대행사로 '연 만들기 체험'행사가 진행되고 '이순신 신호연'을 비롯한 전통연, '호남 연' 등 100점에 달하는 다양한 종류의 연 전시도 열린다. 참가비는 일반부 1만 원, 학생부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농업박물관 홈페이지(www.jam.g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2019 시정보도 사진전' 개막 2일 오후 광주시청 1층 시민숲에서 열린 '2019 시정보도 사진전' 개막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5개 구청장등이 참석해 전시장를 둘러보고 있다.

/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여성 인재 찾기 어렵네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2차례 공모에도 적격자 없어

3차 공모후 내부발탁 검토…전문가 발굴 소극적 지적

전남도가 두 차례나 개방형 직위인 여성가족정책관 공모에 나섰지만 적임자 발굴에 실패했다. 한 차례 더 외부 공모 과정을 거친 뒤에도 적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전남도 내부에서 물색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성 인재 발굴·육성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한몫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9월 17일 이후 공석으로 남아있는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재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정책관은 4급 간부직으로 전남도의 여성·가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전남도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공모 절차를 밟았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전남도는 이번까지 3차례 외부 공모 과정을 진행한 뒤 적임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초 공무원 정기 인사 시기에 맞춰 내부에서 발탁,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전남도의 5급 이상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11.7%) 등을 들어 전남도가 특화된 여성정책을 총괄할 전문가 발굴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민주·경기 광주시갑) 의원의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의 올해 상반기 기준 5급 이상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은 11.7%로, 충남(9.7%), 경북(10.9%)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16.7%)에도 못 미쳤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책' 추진

단전·단수·전기료 체납 등 활용

전남도는 겨울철 한파를 앞두고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22개 시·군과 함께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해 오는 2020년 2월 말까지 추진한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단전·단수, 전기료 체납정보 등 32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등 인적 안전망 1만7000명과 함께 상시 발굴체계를 운영한다.

발굴한 위기가구는 긴급복지지원 등 다소 엄격한 선정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위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자원을 발굴해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또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서민 금융 상담 연계,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주거약자를 위한 행복둥지사업, 전남형 안심 공동-홈 조성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촘촘히 하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